한국 내셔널 담론의 의미구조와 정치적 지향

박 명 규*

≪目　次≫

1. 한국 '내셔널' 담론의 세 유형
   1) '국민적인 것'
   2) 민족적인 것
   3) 종족적인 것
2. 내셔널 담론의 정치적 동원
   1) '국민'과 대한민국 국가주의
   2) 민족과 민족국가 완성론
   3) 소수자 아이덴티티와 동화주의
3. 변증법적 종합
   1) 국민/민족의 긴장
   2) 민족/탈민족의 긴장
   3) 국가/탈국가의 긴장

21세기에 접어든 한국사회는 '내셔널'한 것의 내용과 방향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화와 다원화가 진행되고 분단상황이 반세기 이상 고착화되어오면서 '내셔널'한 것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 지향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세계화시대에 민족이란 무엇인가, 통일은 선한 것인가, 국민국가는 퇴조하고 있는가, 민족주의는 여전히 긍정적인 이념인가, 세계화 시대에 민족문화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소수자 정체성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등 많은 문제들이 어떤 의미에서 '내셔널'한 것을 둘러싼 쟁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근대성 자체를 새롭게 성찰할 것을 강요하는 세계화 시대의 반영이고 그런 의미에서 전지구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흐름들을 강화시키면서 오랫동안 국민국가 단위로 이해되고 구상되었던 담론이나 정책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다양한 논란도 이런 전지구적 논의의 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교육과 정치, 역사기술과 관련된 곳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작가들의 모임에서조차 '민족'이라는 접두어를 붙일 것인가를 두고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는 한국사회인 만큼 이 문제가 갖는 한국적 맥락을 전지구적 이론화와 결합시켜 이해하는 일이 중요한 관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주최 「국제워크숍 :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와 아이덴티티」(2007년 9월 13~14일) 발표논문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다.

이 글은 한국의 최근 경험을 근거로 하여 '내셔널'이라는 개념 속에 담겨있는 집합적 사유의 성격과 그 정치적 함의의 복합성을 밝혀보려는 것이다. 이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내셔널'한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이것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정작 그 개념에 담겨있는 속성과 지향은 동질적인지, 내부의 복합성과 긴장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이런 측면들이 21세기 세계사의 상황 및 한국적 특수성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등을 밝히려는 것이다.

1. 한국 '내셔널' 담론의 세 유형

민족, 국민, 종족과 같이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한국어 개념 대신 '내셔널'이라는 서구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를 먼저 필요하고자 한다. 첫째로 한국사회에서 논의되는 국민, 민족, 종족 등의 개념은 논자마다 또 맥락에 따라 매우 다르다. 같은 의미를 담고서도 다른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고 같은 개념을 쓰면서도 내포한 의미는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소통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연관된 개념어들을 통합적으로 비교하면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둘째로 이런 연관 개념들은 실질적으로 '내셔널'이라는 개념으로 포괄되던 역사적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유사개념들이 사용되는 의미를 내셔널한 것과의 연관 속에서 검토함으로써 관용화된 개념을 성찰적으로 재점검하고 그 정치적 함의의 복합성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로 '내셔널'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다른 지역의 사례들과 비교검토가 용이하고 좀더 비교사적이고 전지구적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어권에서도 '네이션' 이라든지 '내셔널리즘',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같은 개념 자체가 논란거리이지만 이와 관련한 많은 이론적, 분석적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와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1] 이제 "내셔널"이라는 개념과 대응될 수 있는 한국 담론의 내용들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국민적인 것'

첫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와 관련한 공공의 영역, 또는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자격과

1) 물론 이런 시도가 '내셔널'이라는 서구 개념과 '국민', '민족'과 같은 한국어 개념 사이에 논리적 위상이나 학술적 개념어로서의 적합성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여기서 '내셔널'이라는 말은 매우 단순하게 민족, 국민, 종족과 같은 연관개념들을 통칭하는 수준에서, 또 전지구적으로 통용가능한 개념어라는 차원에서 이용된 것일 뿐이다.

관련된 의미를 들 수 있다. 국민국가가 국가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일, 또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구나 제도에 대하여 '내셔널'이라는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립극장(national theater),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국립공원(national park), 국민소득(national income) 등의 말에서 사용되는 '내셔널'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범주, 또는 국가 차원에서 설립되어 재정이나 운영을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나 조직을 의미한다. 사립기관(private institution)에 비하여 훨씬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는 공공성을 지닌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나타나는 국가대표선수(national team)나 국기(national flag)와 같은 용례가 그러하고 이들에 대해 보이는 집합적 열광도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와의 동일시에 근거하는 것이다.

대체로 이런 형태의 내셔널한 것을 지칭할 때는 '국민'이라는 개념어가 사용된다.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자의식, 정서적 귀속감 내지 심리적 자부심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비록 문화적인 동질감과 심리적 연대감, 인종적 동질성 등이 작동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에 바탕을 두는 것이어서 정치적이고 법적인 성격이 강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 발전하고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희망하는 애국심도 한 부분을 이룰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민족적인 것(nationhood)보다는 국가적인 것(statehood)을 더 강조하거나 후자에 입각하여 전자를 파악하려는 시각과 상통한다.

이러한 국민 아이덴티티는 당연히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내셔널'은 일반적으로 국민적인 것을 의미해왔다. 근대국가형성의 주요한 과제로 국민형성이 언급되는 이유도 국민 정체성이 국가의 인적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이 분단국가의 경우는 국민 정체성의 확립이 또다른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즉 분단국가상황에서 정치공동체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과 대립되는 국민의식의 확립은 건국 직후부터 요구되던 과제였던 것이다. 이승만 정부가 반공과 반북을 국가형성의 주요한 요소로 강조했던 것이나 박정희 정부 하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배제와 국가주도적 개발주의를 통한 국민형성의 시도가 모두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당시에 체계적으로 진행된 국사의 강화, 전통문화의 복원 등은 모두 정치적으로 '국민'적 정체성을 창출하려던 시도와 맞물려 있었고 국민교육헌장이나 국민윤리교육과 같이 교육을 통해 국가에 대한 헌신, 공동체와의 동일시, 애국심 등을 내면화시키려던 정책도 본질적으로 국민적인 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치과정이었던 것이다.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이러한 국민 아이덴티티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 영향력의 약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크게 두가지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하나는 분단상황을 무시한 채 현실적인 국가의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분단을 고착화할 수 있으

며 나아가 북한과의 적대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민족적인 분열의식을 조장하게 된다는 것이었다.[2]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운동이 북한 바로알기나 통일운동과 결합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이런 한국적 맥락 때문이었다. 또 하나의 비판은 국민을 강조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무시하는 국가주의적인 억압성을 지닌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저항이었다. 시장의 자율을 강조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로부터 다양한 사상과 활동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회적 자유주의자들까지 국민정체성의 강고함을 해체시키려는 지향을 공유했고 이런 흐름이 이후 90년대 국가권력에 대한 다양한 담론적 비판과 탈신성화 경향과도 연결되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이 지속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1990년대 이후 국민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민주화나 경제성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란 정치공동체의 정당성이 크게 신장된 탓이라 할 수 있다. 또 그에 따라 국가가 주도하는 내셔널 담론의 힘이 커진 부분도 있다. 다만 이전에는 국가권력이 직접 주도하여 국민적인 것을 강조하였는데 반해 지금은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동일시가 확대되는 경향이 강하다. 2002년 월드컵에서 나타난 "대한민국" 응원단의 열기, 한류에 대한 자긍심, 여전한 박정희에 대한 대중적 인기, 한국사회가 경험한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대한 집합적 자부심 등이 이런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들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갈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이러한 집단적 자부심이 생겨난 배경에는 "오랜 투쟁으로 성취한 민주화, 중진국의 대열에서 벗어날 정도로 급성장한 한국의 경제력, 여기에 탈냉전과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대북 콤플렉스에서의 해방이 겹쳐진 상황에서, 분단체제를 정상적인 삶의 조건으로 경험하고 살아온 세대의 감수성"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3]

2) 민족적인 것

한국사회에서 '내셔널'한 것에 해당하는 또하나의 매우 중요한 의미는 '민족'과 관련된 사고와 정서이다. 민족과 국민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한국사회에서 양자는 매우 다른 함의를 지닌다. 즉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와 결부되어 사용되고 북한을 배제하는 정체성이라면 민족은 남한과 북한을 하나의 범주로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민족문제(national problem), 민족경제(national economy), 민족통일(national unification), 민족분단(national division) 등의 말들이 표방하는 '내셔널'은 남북한을 함께 아우를 때에야 비로소 가시화될 수 있는 현상들이다. 영어로 꼭같이 national economy로 표기되더라도 국민경제로 번역될

2) 해방직후 상황, 분단국가의 형성기에 대한 현대사 인식이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지니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보는 시각에 대하여 분단시대의 출발, 민족국가수립의 실패와 좌절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1980년대에 크게 확산되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3) 졸고, 2006 「21세기 한반도와 평화민족주의」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이병천 외), 한울, 476-477면.

때와 민족경제로 번역될 때 적어도 한국에서의 함의는 매우 다르게 된다. 국민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의미한다면 민족경제는 남북한을 함께 고려하는 경제를 뜻하게 되어 그 범주가 다를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 대립적일 수도 있다.

민족은 십수세기에 걸쳐 장기적으로 존속해온 것으로 상정되는 동질적 생활공동체, 문화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오랜 시기 언어와 생활방식, 정치적 경험을 공유해온 남북한은 당연히 하나의 민족으로 간주된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적 속성 때문에 현재의 분단상황을 부정하고 남북한의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는 정치적 민족주의와 친화력이 강하다. 흔히 '단일민족'의식이라고 불리는 이 집합의식은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원리를 일차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독립국가로 존속해야 한다는 정치적 민족주의 원리를 또 하나의 축으로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의식은 19세기 말 이래 강력하게 재구성되었고 일제 식민지 하에서 지속적인 반제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만든 동력이 되었다.

한국사 (Korean History)는 이러한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논리체계이다. 십수세기 이전부터 동질적인 생활공동체, 역사공동체를 이루어온 '한국 민족'을 역사의 주체로 설정하는 역사인식은 신채호 이래의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4] 이런 역사인식에 따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십수세기 동안 동일한 문화를 형성하고 같은 정치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집합적 경험을 공유한 단일민족임이 학문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기점을 고조선으로 보는가 고구려로 보는가, 통일신라로 보는가 아니면 고려로 볼 것인가 등은 다소의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근대 이전부터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서 국가를 이루고 생활공동체로 존속해온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공감대가 존재한다. 특히 지속적인 민족해방, 민족국가건설을 추구했던 20세기 전반의 정치적 경험으로 인해 이런 단일민족의식은 강력한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최근 이런 역사해석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대사나 전근대사에 대한 민족사적 해석이 지나치게 근대적인 관점에 의해 '구성'되거나 '만들어진' 것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5] 원칙적으로 모든 역사해석이 현대와의 대화라는 사실에서 비추어 보면 이런 주장 자체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실제로 근대 이후에 민족적 정체성이 구성되거나 만들어진 사례들이 세계사적으로 적지 않다. 또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되는 21세기에 들어와 전지구적으로 민족정체성이 갖는 정치적 함의에 대한 비판과 염려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상정했던 것보다는 민족이란 범주의 내포가 좀더 복합적이고 긴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고 실생활 속에 지나친 동질적 민족의식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경험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

4) 신용하, 1986「신채호의 민족주의와 신역사 - 그의 초기 민족주의사관과 후기 민족주의사관」『아세아학보』 18.

5) 이성시의 『만들어진 고대』나 Hyung Il Pai, 2000 *Constructing "Korean" Origin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참조.

하지만 이런 비판의 적합성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반도에 오랫동안 존속해온 민족공동체의 역사성, 그 문화적 동일성과 집합적 정체성의 사실성을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것은 역사적 구체성을 무시하는 추상적 보편화의 오류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자칫 민족과 정체성에 관한 서구의 경험과 이론을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오리엔탈리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전히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중요한 목표 가치로 설정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무시하는 논의가 될 수 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또 세계사적 차원에서 민족논의가 갖는 다양성과 비판성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동시에 민족이란 범주가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독특하고도 이중적인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는 일이 매우 긴요하다.[6]

3) 종족적인 것

세 번째로 1990년대 이후 국민이나 민족으로 포괄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내셔널한 것과 관련되지만 국가공동체나 문화공동체에 귀속되기 어려운 모순적인 존재들의 증가로 인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국적을 달리하는 해외한인들과의 교류확대와 외국인이주자들의 증가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인 가운데 디아스포라적 집단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조선족, 일본 조선인, 미주 한인, 러시아 고려인이 내세우는 '내셔널'한 것의 의미가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내셔널'한 정체성은 자신들이 속한 국가나 사회에의 귀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생활공동체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모국과의 문화적 연계, 심리적 동일시를 강조하는데서 나타나는 것이다.[7]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문제가 뒤집힌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국내거주 외국인들이다. 예컨대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나 결혼이주자들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필리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한국사회에서 논의되는 '내셔널'한 담론과 어떤 관련을 가져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정한 기간 후 본국으로 귀국할 일시체류자로 간주되는 한 이들의 정착이나 통합 문제는 큰 관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체류가 장기화, 제도화되고 결혼이민이 급증하게 되면 이들을 한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이 문제는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동시에 '필리핀인'이고자 한다. 마치 미주한인이 미국시민이자 동시에 한국인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과 동일하다. 여기서 내셔널한 것과 종족적인 것

6) 이 점에서 베네딕트 앤더슨이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로 개념화한 것을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좀더 비판적이고 비교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신용하, 2006「민족의 사회학적 설명과 상상의 공동체론 비판」『한국사회학』 40집 1호 참조.

7) 인류학자들을 중심으로 종족성과 민족성에 대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도 이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김광억 편, 2005『종족과 민족』, 아카넷 에 실린 김광억의 글 참조.

의 관련성이 쟁점으로 부각된다. 내셔널한 것을 국가공동체 또는 문화공동체의 공통된 속성으로 파악하는가 아니면 종족집단의 자의식 내지 문화적 정체성으로서 파악하는가에 따라 매우 다른 지향이 나타나게 된다. 전자의 경우는 내셔널한 것을 상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내셔널들의 공존을 중시한다. 하지만 후자의 시각은 서로 다른 종족적 배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동일한 내셔널 정체성을 지니도록 동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필리핀 출신의 한국국적 소유자에게 '내셔널'한 것이란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가라는 이 물음은 21세기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새로운 문제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종족성을 근거로 내셔널한 것을 상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한국에 이주해온 소수종족집단들도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위해 내셔널한 것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오랫동안 단일민족의 틀 속에서 살아온 한국사회에서 다종족적 상황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십수년에 불과하고 그런 짧은 기간에 의식과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 더구나 남북한의 통일문제나 사회의 통합문제를 고려할 때 종족성을 독자적인 범주로 취급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내셔널한 것이 공동체 내부의 소수자들에게는 동화를 강제하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억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도 서서히 알려지고 있다. 이 점에서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언어나 인종, 역사의식의 인정을 통해 내셔널한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해진다. 국민국가 체제를 근대성의 핵심으로 보면서 탈 근대적 변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에서도 유사한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세계화와 다원화를 경험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증대하고, 외국인 체류자가 늘어났다. 종교와 관습, 인종의 다양성에 따라 다문화주의적 현상이 확산되었다.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분명하다. 이 입장에서는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집합적인 차원보다는 오히려 개인적 차원의 자의식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국가 중심적, 단일 민족주의적 동질화가 갖는 억압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거주 외국인, 국제결혼, 혼혈, 다문화적 공존 등의 현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민족적인 것이 지나치게 강조되지 않아야 할 것을 주장한다.[8]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중시하는 경우에도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 발전주의, 배타주의, 실적주의와 다른 생태적 가치, 인권적 지향, 개인적 자율 등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강압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8) 최협 외, 2005『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 오경석, 2005『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 등의 책자 참조.

2. 내셔널 담론의 정치적 동원

이상 살펴본 세 유형의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될 때 어떤 기능과 문제점을 지니게 될 것인가? 실제로 각각의 담론이 우리 사회에서 동원되고 활용되는 방식은 어떠한가? 이를 특히 통일논의와 관련시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국민'과 대한민국 국가주의

국민적인 것을 중심으로 통일문제를 사고할 경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중심적 시각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에 대한 충성심, 귀속감, 소속감을 강조하고 그 국가의 발전과 위신을 중시하는 일종의 '대한민국 내셔널리즘'의 강화가 예상된다. 이 부분의 전형적인 모습은 70년대 정치교육의 주요한 요소였던 국민교육헌장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이 헌장은 비록 민족 개념을 동원하고 있지만 엄밀하게는 대한민국에 속해있는 국민으로서의 동질의식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성, 주입, 강화하려는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 헌장은 '애국애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직접적인 정치교육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단위로 생각하는 많은 논의들이 이런 국가중심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곤 한다. 국민경제에 대한 강조,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려는 전략, 국가의 힘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각종 외교 전략이나 국제 활동 등은 모두 대한민국 중심의 내셔널 담론을 바탕으로 한다. 대체로 이런 입장을 취하는 논자들은 국가와 관련한 개념들을 중시한다. 예컨대 국가의 위상, 국가의 경쟁력, 국가의 발전 등이 그 전형적 예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강력한 국가발전의 동원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국민 아이덴티티를 통일논의와 연결시켜 검토해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중심에 두고 통일의 과정과 결과를 구상하게 된다. 남북한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체제 내로 북한을 흡수시키고 동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통일은 대한민국이 지난 50년 이상 견지하고 발전시켜온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확대시키는 과정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가치와 원리를 북한지역에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 개방적인 개인주의 등은 통일과 더불어 확대되고 더욱 심화되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다.

지난 1980년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의 통일논의는 상당부분 이러한 관점을 암묵적으로 전제했다.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이란 남한의 가치와 제도를 북한으로 확대시키는 것 이외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보수적인 정치인들에게서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이들은 통일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곧 통일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확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따라서 북한과의 합의나 공존을 전제한 통일방안이나 실천운동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연방제나 국가연합에 대한 구상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를 용인하는 것인 만큼 이런 입장에서는 용납되기 어렵다. 일례로 2007년 6월 6일 '북핵 폐기, 자유민주통일 국민대회'를 주최한 일단의 보수진영 인사들이 발표한 한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우리는 대한민국이 건국 후 60년 동안 이룩해 온 자유와 번영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원리는 철저히 수호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하는 북한 정권과의 기만적 평화체제나 헌법파괴적인 국가연합의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며……"

무조건적인 반북논리를 내세우는 정치적 보수주의자와는 다르지만 한반도의 20세기를 문명사적으로 파악할 것을 강조하는 시각도 이 점에서는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 민족사를 벗어나 문명사적 역사인식을 강조하는 이영훈은 대한민국의 건립을 단순한 분단국가의 출발로 보지 않고 중요한 문명적 전환이 일어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한국역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근대적 문명의 핵심적 요소들이 자리 잡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반면 북한은 그와 같은 문명적 요소들을 발전적으로 수용, 확산시키는데 실패한 체제이다. 따라서 남북한 간에 현존하는 문명적 차이를 무시한 채 민족적 동질성만을 강조하는 통일론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가 최근 펴낸 [대한민국 이야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이념과 국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면서 민족사적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9]

이러한 주장은 한국사회에서 민족이라는 범주가 가지는 정치적 함의를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한국사회에서의 내셔널한 것을 국민 중심으로만 사고할 때 따르는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시각이 반세기 이상 사회구성원들의 생활 속에 내면화된 '국민' 아이덴티티의 실체성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점 또한 사실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공동체 그 자체이다. 경제성장도 민주화도 심지어 탈 국가적 비판의식도 대한민국이라는 장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맥락을 통일논의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통일이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철학적 가치, 공동체적 지향이 무엇인가 하는 문명론적 물음에 대하여 통일담론은 아직 체계화된 틀을 만들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근대적인 가치들, 즉 자유와 평등, 평화

9) 이영훈, 2007『대한민국이야기』, 기파랑.

와 시장가치 등이 중시되는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뿐이다. 북한의 헌법이 내세우는 가치는 분명 대한민국의 그것과 상당부분 다르다. 따라서 통일에 있어서 공유할 수 있는 헌법적 이념을 어떻게 상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매우 냉정한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 아이덴티티에 근거하여 통일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은 적지 않은 어려움도 내포한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국민정체성을 근거로 할 때 불가피하게 흡수통일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공동체적 가치와 정체성이 확산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이 북한으로부터 수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시각은 불가피하게 남북 간에 근본적인 불화, 대립, 긴장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평화라든지 공존과 같은 논리가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상황,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2) 민족과 민족국가 완성론

반면 민족범주는 현존하는 남북한 분단구조를 넘어서서 하나의 정치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통일지향성과 강한 친화력을 지닌다.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 믿음, 정서는 한반도의 남북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닌 생각이자 마음이다. 전쟁까지 경험하고 가장 공존하기 어려운 적대적이고 이질적인 체제를 지닌 두 사회가 끊임없이 통일을 희구하게끔 만든 동력도 바로 이 민족이라는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헤어진 가족이 다시 합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듯 억지로 분단된 하나의 민족이 다시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것은 별도의 이유가 필요 없는 당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따라서 남북한이 공유하는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동원하는 것는 제도적인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문화적인 자산으로 간주되고 나아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남한과 북한은 모두 '통일'을 주요한 헌법적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 시에 헌법수호, 국가보위, 국민의 복리증진, 민족문화의 창달과 함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해야 한다. 1998년 개정된 북한헌법 제9조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여 역시 통일을 주요한 목표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10] 남북한 모두에서 통일이 이처럼 높은 수준의 목표로 설정되는 이유 역시 유사하다.

---

10) 장명봉 편, 2006『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남북한 간에 중요한 합의로 인정되고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의 내용은 모두 한결같이 이런 공통성을 바탕으로 한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3대 원칙으로 내세웠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족대단결은 같은 민족끼리의 단결이 통일의 주요한 근거라는 것이다. 1992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간의 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규정하고 '민족적 화해'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2000년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6.15 공동선언에서는 "통일문제를 나라의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이후 6.15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된 남북한의 공동행사에서는 민족적인 것에 대한 말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 부분은 특히 북한의 경우 두드러져서 북한 문건에서 국민이라는 말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족이라는 단어는 지나칠 정도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6.15 공동선언과 관련된 다양한 발표문들을 보면 거의 모든 항목에서 '민족'을 내세우고 있음을 보게 된다. 민족공조, 민족대단합, 우리 민족끼리, 민족번영 등등의 말들은 민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통일을 추동하는 주요한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연방제나 연합제 논의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민족, 두 개의 제도" 또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두개의 정부"와 같은 말들도 결국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이 통일을 가능케 하는 근본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의 민족 담론을 지나친 '내셔널리즘'으로 비판하면서 통일논의의 탈 민족화, 아이덴티티의 탈 민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나친 민족의 신성화, 민족주의적 설명은 실질적인 통일과정에서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무시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또한 남북한 간에 상이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제도적 차이, 가치체계의 간격, 상이한 세계관을 민족적 아이덴티티로 용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는 경향이 강하다. 무엇보다도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 민족 범주는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별다른 방향성을 갖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동원하여 통일에의 강력한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일국가의 구성 원리, 정치경제적 제도의 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한다. 국가구성의 정치원리에 최소한 합의하지 못한 채 문화적, 인종적, 역사적 동질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근본주의적인 대립과 분열, 긴장을 낳을 수도 있다. 나아가 민족대단합 만을 강조할 때 어떠한 정치체제가 통일국가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가 무시될 수 있으며 "어떤 형태의 통일도 선이다"라는 주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 민족 담론이 갖는 이런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문화적 함의를 지니는 민족 범주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3) 소수자 아이덴티티와 동화주의

한국사회에 외국인들의 이주와 정착이 진행되면서, 또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녔지만 국적을 달리하는 해외한인들의 등장과 더불어 '내셔널'한 것의 지나친 강조는 그러한 소수자들을 강제로 동화시키려는 억압적인 동화주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주의와 소수종족들의 정체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한국사회의 내셔널한 것의 강력한 헤게모니를 문제시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페미니즘의 문제의식도 힘을 합했다고 할 수 있는데 내셔널리즘을 억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또 내셔널한 것을 개인의 정체성 차원에서 해석하는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내셔널'한 정체성이 반드시 특정 국가에의 동일시나 충성심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적이나 정치공동체에의 귀속문제와 별도로 개인의 정체성 및 집단의 문화적인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다문화주의의 지향과 맥을 같이 한다.

탈 민족주의, 다원주의를 표방하면서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상대화를 주장하는 논리가 통일담론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탈 민족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통일이란 새로운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현존하는 분단체제를 넘어서는 일로 이해되고 있다. 스스로를 생태정치학자로 규정하는 권혁범은 '통일이 아닌 탈 분단'을 강조하면서 통일이나 민족중흥, 국가발전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민족주의를 그대로 수용해서는 생태질서를 무너뜨리는 근대의 위험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가 중심적 민족논의를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통일보다도 탈 분단이 더 중요하며 국가적인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평화에의 지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11] 소수자들의 권리를 강조하는 다원주의자,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에게서도 내셔널한 것을 여러 정체성의 하나로 상대화시키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페미니스트들이나 소수자 인권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내셔널한 것을 강조하는 담론에 대해서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은 이런 정서나 지향과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은 내셔널한 것의 의미를 좀더 복합적이고 다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통일논의와 관련해서 보면 통일이 단순히 더 큰 국가의 구성, 더 강한 발전국가의 형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다양한 범주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국가형태를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국가의 형태는 근대적인 국민국가 모습과는 다른 복합국가적 모습을 지니게 되리라는 논의들이 나타나게 된다. 또 여러 국민국가 단위의 국가간체제가 지역주의적 통합질서로 재편되는 유럽의 경험에 기대어 한반도의 통일과정을 동북아시아의 지역통합 흐름과 연결시키는 논의로도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의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통일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확인할 수도 있다.[12] 예컨대 재일조선인 학자

11) 권혁범, 2000『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솔.

서경식은 재일조선인이 "네이션인가 에쓰닉"인가라고 질문하면서 단순히 일본사회 내의 소수자, 즉 에쓰틱 집단으로 간주되거나 남북한 민족의 일부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13]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한반도의 통일과 새로운 체제구상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모색하려는 것인데 이런 논의가 확대되면 일본의 조선인, 중국의 조선족, 나아가 미주한인 등이 통일된 한국사회에 일정한 자격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체제구상이 요청되는 것이다.[14]

하지만 이런 생각은 21세기적 미래상을 반영하는 참신함이 있지만 역시 구체성과 실천성에서 취약함을 지닌다. 다문화적인 지향, 다민족적 정체성을 수용하면서 통일을 지속적으로 사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입장에서 통일은 현존하는 남북한의 강력한 국가구조를 완화시키고 해체시킴으로써 분단의 억압성과 위험성을 약화시키는 것과 동의어가 된다. 더욱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관점을 매우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2006년 4월 27일자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다민족 다인종 사회론은 민족말살론"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사설은 "민족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성원들의 사회생활단위이고 운명공동체이며 …단일성은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민족의 영원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필수적인 단합의 정신적 원천'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민족 다인종 사회론은 민족의 단일성을 부정하고 남조선을 이민족화, 잡탕화, 미국화하려는 용납 못할 민족 말살론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5]이런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면 다문화주의의 지향을 바탕으로 남북의 통합과 통일을 모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힘든 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3. 변증법적 종합

위에서 보듯 세가 지 유형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담론이 모두 일정한 근거와 동력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한계점도 노정하고 있다. 필자는 이들 세 흐름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강조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통일담론으로서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중시하는 바른 자

12) 필자의 글, 2004 「한인 디아스포라 논의의 사회학적 함의」 『한국의 소수자』, 한울 참조.
13) 서경식, 2006 『난민과 국민 사이』, 돌베개.
14) 와다 하루키나 강상중 등이 말하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구상이나 최근 여러 가지로 논의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복합국가논의 등이 이런 관심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 등장한 동아시아론 가운데 이런 함의를 지니는 것도 찾아볼 수 있다. 필자의 글, 2005 「한국 동아시아 담론의 지식사회학적 이해」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김시업 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참조.
15) 『로동신문』 2006년 4월 27일자 사설.

세가 아니라고 본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셔널 아이덴티티 연구와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1) 국민/민족의 긴장

앞서 살펴본 첫 번째 논의와 두 번째 논의 사이에는 밀접하면서도 혼란된 어긋남이 존재한다. 내셔널 아이덴티티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느끼는 정체성도 포함되고 남북한을 함께 포괄하는 민족으로서의 정체성도 내포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명확한 차이와 관계를 구별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국민적인 아이덴티티와 민족적 아이덴티티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민족과 국민은 일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만 역사적인 조건에 따라 강력한 민족의식이 국민형성을 추동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구성된 국민범주가 민족형성의 바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의 남북한은 매우 독특한 사례라 할 수 있는데 국민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이 똑같이 강력하게 동시적으로 작동하면서 상호 대립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북한을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는 민족과 각각의 정치공동체 귀속감을 중시하는 국민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정치적 지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국민범주를 중심으로 민족범주의 상대화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 역으로 민족정체성을 근거로 국민범주의 상대화를 강조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를 중심으로 사고하면 민족이란 정치적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문화적, 역사적 범주에 불과하다. 반면 민족범주를 중심으로 국민정체성을 상대화시키게 되면 현존하는 두개의 분단국가 질서에 대한 강력한 비판 담론으로 변화된다. 70년대 이래 반정부운동을 주도했던 사회운동세력이 언제나 '민주', '민중'과 더불어 '민족'을 강조했던 이유도 민족이라는 개념이 갖는 현실 파괴적인 속성 때문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과 민족 어느 쪽을 중시하는가가 역사해석에 있어서나 정치적 지향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시기의 정치적 갈등 가운데는 양자의 한 편을 강조하려는 싸움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21세기적 상황에서 볼 때 양자 중 어느 하나를 택일하여 통일의 담론으로 구성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재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양자의 긴장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아이덴티티가 내포하고 있는 헌법적 속성, 시민권적 자격, 정치공동체의 가치체계 등을 민족 아이덴티티가 강조하는 문화적 동질감과 심리적 자긍심 등에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앞세워 민족 범주의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민족을 앞세워 국민 범주의 현실적 의의를 부인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것이

다. 민족적인 것이 갖는 강력한 추동력과 함께 그것을 국민적인 것의 가치지향과 결합시키려는 정교한 정치사회학이 필요할 것이다.

2) 민족/탈민족의 긴장

두 번째 범주와 세 번째 범주 사이에서의 갈등과 긴장 역시 앞으로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쟁점이다. 여전히 분단국가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다원화하고 있고 구성원의 종족적 구성도 다양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법적으로는 임시거주자들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최근 유엔은 한국정부에 대하여 단일민족적 폐쇄성으로부터 다문화적 상황으로 이행하는 제반 조치들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부 역시 다문화 및 다민족화의 상황에 대비하는 정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문화적 상황에 맞는 출입국관리 및 체류자격의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적 권리의 보편성과 차등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다문화적 상황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국제결혼이나 혼혈계 한국인 문제, 다문화적 갈등과 접촉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등이 대중문화의 주요 소재로 부상하기도 한다.

아직은 한국사회가 종족과 민족의 갈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라기보다 내셔널한 것에서 민족범주가 갖는 압도적 우위로 인해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점점 더 다원화가 진행되면 민족과 탈 민족, 민족과 종족성의 문제가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통일과정에 접어들게 될 때, 북한의 지나치게 강한 종족적 민족관념이 탈 민족이나 다종족적 사고와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갈등과 긴장 역시 양자택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실질적인 효과도 담보되기 어렵다. 한국사회가 진정으로 문화적인 다양성과 유연성을 지니면서 분단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족적인 것에 대한 강조와 함께 다민족 내지 탈민 족적 지향이 강화되는 현상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 세계화의 진전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국민국가 건설이란 묵은 과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다종족적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내셔널한 것의 통합성을 증진시켜야 하는 모순적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혜로운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탈북 새터민의 문제, 재외한인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21세기에 요구되는 '내셔널'한 것의 함의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3) 국가/탈국가의 긴장

통일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역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단일한 국가를 수립하는 정치적

차원의 일이다. 따라서 통일은 불가피하게 국가단위의 정체성, 국민적인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하지만 앞서 본 바대로 한반도, 특히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세계화하면서 다원화의 경향이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동아시아 지역국가들과의 연계도 매우 급격히 진전될 것이고 WTO 체제 하에서 경제나 문화에서는 국경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탈 민족적 상황이 확대될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대세이다.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통일국가의 형성과 한반도 구성원의 집합적 정체성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질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이한 시각이 가능하다. 여전히 근대국가의 형태가 인류역사의 주요한 단위가 되리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한반도에 국민국가적인 통일국가를 만드는 작업의 소중함을 강조하게 된다. 이 입장에서는 비록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국가로서의 통합성과 국민적 범주의 명료한 경계성을 무시하지는 못한다. 다른 한편으로 21세기에는 더 이상 국가주도적 질서가 유지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근대국가적 조직형태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치공동체의 모색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밖으로는 지역화가 진전되고 안으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되는 새로운 국가형태,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미래를 탐색하는 것인데 오늘날 유럽연합 모델에 대한 관심이나 일부 다문화국가의 실험이 그런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다.[16]

이 점에서 한반도의 통일과정도 이러한 21세기적 변화의 흐름과 관련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동북아시아의 지역화나 탈 국가적인 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한반도 통일의 미래상을 탐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독일의 통일과 EU 통합이 함께 진행되었던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과정과 동아시아의 상호소통과 네트워크의 진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통일모형으로 논의되는 연방제나 국가연합의 논의도 훨씬 포괄적인 문제의식과 결합되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통일이 폐쇄적 민족주의의 재생이나 국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민족적, 국가적, 시민적 아이덴티티들이 자유롭게 공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 될 수 있으면 훨씬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17]

한반도의 남북한이 현재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의 통일된 국가체제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정치화가 나타날 것이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바람을 정치적 동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대중적으로 활용해

16) 유럽의 지식인을 대표하는 하버마스가 유럽통합의 정신과 독일통일의 경험을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이나 시키와 카즈오가 캐나다의 연방정치를 대상으로 Lijphart의 "다극공존형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 or consocialtionalism)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정치통합을 이론화하려는 시도 등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버마스, 1996「민족통일과 국민주권」『현대성의 새로운 지평』(한상진 편), 나남 ; 石川一雄, 1994『エスノナショナリズムと政治統合』, 有信堂.

17) 필자의 글, 1999「변혁의 논리와 복합적 정치공동체」『창작과 비평』107.

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내셔널 아이덴티티는 늘 정치적으로 활용되었지만 21세기에 들어와 변화하는 세계적 상황과 더불어 좀 더 정교하고 이론적인 성찰을 동반하면서 그 실천적 함의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민족, 종족과 같은 세 가지 이념형적 지향이 갖는 부분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 세 지향의 긍정적 종합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도 인정하는 가운데 다문화적, 다민족적 상황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에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형성을 꿈꾸는 일이 통일논의에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주제어 : 국민, 민족, 정체성, 통일, 정치공동체, 근대국가, 탈민족

접수일(2008.4.10), 심사시작일(2008.4.25), 게재확정일(2008.5.14)

〈Abstract〉

Three types of 'the national' and their political implications in contemporary Korea

Park, Myoung-kyu *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complex meaning of 'the national' in contemporary South Korea. The main argument is that the national discourse in Korea is so complex that 'the national' should be differentiated into three concepts; *kukmin*, *minjok* and *hankukin*. *Kukmin* is used to identify the Republic of Korea as a nation (for example national income is usually expressed as '*kukmin* income'). *Minjok* is used to express both South and North Korea as a historically and culturally homogeneous community (for example 'national unification' is said as '*minjok* unification'). Finally *hankukin* is used to mention ethnic Koreans without relation to any specific political community.

Three factors are examined for the differentiation of 'the national' : development of the stateness in South Korea, cultural nationalism and globalization. Due to the strenthening of the stateness since democratization and industrializaion, the *kukmin* identity is growing rapidly in recent Korea. At the same time, there is still a strong sense of commonnes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minjok* identity. Finally globalization brings about multi-ethnic and multi-national phenomena in Korea, which makes Koreans sensitive to the ethnic identity. In conclusion, 'the national' needs to be explained contextually in order to understand its historical specificity.

Key Words : kukmin, minjok, nation-state, the national, identity

* Professor, Dep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